

##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의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의 “위험성”을 “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의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의 “위험성”을 “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의 “사항”을 “사항 등”으로 “부과한다.”를 “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의2(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내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려는 시·도지사는 통일적인 자료의 집계·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조사대상인 대부업자등에게 조사 기준이 되는 기간·대상월·대상일, 금액의 단위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고지할 것
2.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사할 것. 다만, 시·

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따라 조사하거나, 대부업자등의 효율적 감독·검사를 위해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

### 3. 조사된 자료의 기재 오류, 허위·착오기재 여부 등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

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시·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조사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파악하거나 대부업자등과 대부 이용자의 현황을 집계·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서식에 조사항목을 추가하도록 시·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④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 실태조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·도지사(시·군·구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⑥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

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3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(법 제13조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한다)

별표 1 제1호다목의 “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”를 “,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, 그리고 불법중개수수료와 관련된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라목의 “및 차입의 위험성과 불법중개수수료”를 “, 차입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, 불법중개수수료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제1단에서 제3단 중 어느 하나로 하고,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제4단에서 제5단 중 어느 하나로 한다.

- 1) "과도한 빚, 고통의 시작입니다."
- 2) "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."
- 3) "과도한 빚,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"
- 4) "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."
- 5) "대출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."

별표 3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1. 일반 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 적용한다.

나. 시·도지사등은 위반행위의 동기,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면하거나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2. 개별 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해당 조문	부과 대상	과태료 부과기준		
			1회	2회	3회 이상
가. 법 제3조제7항을 위반하여 분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1호	법인	200	400	600
	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나. 법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2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다. 삭제 <2013.6.11>					
라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호	법인	200	400	600
	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마.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3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
바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사. 법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상호 중에 "대부" 또는 "대부중개"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2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아.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3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자.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4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차.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와 계약관계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4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카. 법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5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타.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필로 기재하게 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5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파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·재산	법 제21조제1항	법인	500	750	1,000

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	제6호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하.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담보제공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	법 제21조제1항 제6호의2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거.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7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너.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8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더.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의 문안과 표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6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러.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	법 제21조제1항 제8호	법인	1,000	2,000	3,000
		법인이 아닌 자	500	1,000	1,500
머.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9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며. 법 제9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업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0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서.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1조제1항 제10호의2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어.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8호	법인	200	400	600
		법인이 아닌 자	50	100	200
저.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1호	법인	1,000	2,000	3,000
		법인이 아닌 자	500	1,000	1,500
처.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	법 제21조제2항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
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	제9호	아닌 자			
커. 법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, 거짓으로 작성하거나,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	법 제21조제1항 제12호	법인	600	1,000	2,000
		법인이 아닌 자	200	500	1,000
터.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	법 제21조제2항 제10호	법인	500	750	1,000
		법인이 아닌 자	100	250	500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6조(대부조건	의 게시 등)	제6조(대부조건	의 게시 등)	
① (생	략)	① (현행과	같음)	
② 법 제9조제2항	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② -----제6호에서 -----		
1. ~ 2. (생	략)	1. ~ 2. (현행과	같음)	
3. 과도한 차입의	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	3. ----- 위험성 및		
		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		
		하락 가능성-----		
		-----		
③ 법 제9조제3항	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③ -----제6호에서 -----		
1. ~ 3. (생	략)	1. ~ 3. (생	략)	
4. 과도한 차입의	위험성을 알리는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	4. ----- 위험성 및		
		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		
		하락가능성-----		
		-----		
제8조의2(과징금의	부과기준 등)	제8조의2(과징금의	부과기준 등)	
① 법 제14조의2에	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.	① -----		
1. ~ 3. (생	략)	----- 사항 등-----		
		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.		
		1. ~ 3. (현행과	같음)	



② (생 략)

제9조의2(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의 관보 등 게재)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의2(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내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조사하려는 시·도지사는 통일적인 자료의 집계·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조사대상인 대부업자들에게 조사 기준이 되는 기간·대상월·대상일, 금액의 단위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고지할 것
2. 대부업자등의 영업실태를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사할 것. 다만, 시·도지사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따라 조사하거나, 대부업자등의 효율적 감독·검사를 위해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사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3. 조사된 자료의 기재 오류, 허위·착오기재 여부 등 내용의

적정성을 확인할 것

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실태를 조사하는 시·도지사는 대부업자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조사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파악하거나 대부업자등과 대부 이용자의 현황을 집계·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서식에 조사항목을 추가하도록 시·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④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 실태조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·도지사(시·군·구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시·도지사는 해당 교육에 소속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송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.

<p>제11조의3(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</p> <p>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8조의7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11. ~ 14. (생략)</p>	<p>⑥ 행정자치부 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의3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의2.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(법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한다)</p> <p>11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612